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②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일시 : 2014.12.17(수), 07:30~

장소 : 의원회관 8간담회실(211호)

민주정책포럼 Season II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 취지 및 목적

-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적 요구 확산에 따른 방향 모색 및 학습의 장 마련
-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경제적 계층갈등의 현실과 원인 진단, 사라진 중산층 복원,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및 복지확대 방안 논의

□ 포럼 개요

- 일 정 : 2014.12.10(수)~, 07:30~09:00 [매주 수요일, 총 3회]
- 장 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의원회관 211호실
- 대주제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 참 석 : 당 지도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정책위원회 및 당직자

□ 프로그램

일시	분야	강연 주제 및 연사	지정토론	장소
12. 10(수) 07:30~09:00	정치	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기준 의원 오영식 의원	국회본청 귀빈식당 (1호실)
12. 17(수) 07:30~09:00	사회	②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원식 의원 황주홍 의원	의원회관 8간담회실 (211호)
12. 24(수) 07:30~09:00	복지	③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익 의원 윤호중 의원	의원회관 8간담회실 (211호)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시리즈 ②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 개요

-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07:30 ~ 09:00
- 장 소 : 의원회관 8간담회실(211호)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 강연 주제

-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 초청 연사

-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진행 순서

사 회 : 홍종학 의원(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 간	내 용
07:30 ~ 07:45	개 회
07:45 ~ 07:5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07:50 ~ 07:55	축 사 : 백재현 정책위의장
07:55 ~ 08:20	강 연 : 이재열 교수
08:20 ~ 08:55	지정토론 : 최원식 의원, 황주홍 의원 자유토론 : 참석자 전체
08:55 ~ 09:00	폐 회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 성장의 역설, 민주화의 역설

한강의 기적. 한국의 성공을 요약하는 말이다. 2차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국민소득 2만불대의 선진국에 진입했으며, 또한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루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따지고 보면 기적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성취는 외국에 나가보아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 혹은 아시아권의 어느 공항에 내리더라도, 처음 우리를 맞아주는 것은 한국 기업의 광고판이다. 먼 외국에 도착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이유는 전세계로 한국의 경제영토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기적의 나라로 칭송받는다. 첨단 전자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중화학 공업제품뿐 아니라 ‘한류’로 표현되는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인들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외부의 찬사와 내부의 자학간에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가장 큰 이유는 삶이 팍팍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지해 온 높은 경제성장 덕분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자살률은 급증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최고 수준이 되었고, 반대로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최저수준이다. 가히 ‘풍요의 역설’(paradox of affluence)이라고 불릴 만하다. 1987년의 직선제 개헌을 계기로 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지속되었지만, 정치에 대한 냉소는 커지고 선거에서의 투표참여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민주화의 역설’(paradox of democratization)에도 시달린다.

팍팍한 삶의 근저에는 장시간 노동이 자리잡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2011년 기준으로 2,090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해당한다. 이는 OECD 평균인 1,776시간에 비해 훨씬 많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의 1,548시간에 비하면 무려 한 해 542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피로감이 누적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 시간 일을 해야 하니, 여가시간은 늘 부족하고, 주말의 대부분은 낮잠을 자거나 누워서 TV를 보는 것으로 보내는 것이 ‘피로사회’를 사는 한국인의 일상이다. 적극적인 여가를 생각하기 힘들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

키기도 쉽지 않다.

문제는 장시간 일한다고 해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의 계산에 의하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0.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8위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근로자가 1시간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지표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르웨이의 87.1달러와 비교하면 35%에 불과한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65.0달러, 일본은 40.3달러였다. 34개국 평균은 47.0달러로 한국보다 54.6%나 높았다.

그러나 이렇게 밤낮으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제한되어 있다. 50대 초중반이 되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게 되므로, 한순간에 직장에서 물러나게 될 뿐 아니라, 스스로 생산적인 일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가질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갑자기 직면하게 되는 텅 빈 자리는 불안의 대상이 된다.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은 한국의 중산층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고도성장으로 축적된 경제적 풍요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계층이 누적되면서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 중산층은 더 이상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용인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결의를 ‘직선제’라는 요구를 통해 관철하는 중심 세력이 되었다. 희망과 비판의 역동성을 가진 중산층의 등장은 한국의 고도성장이 가져온 사회적 성과였다. 그러나 역설의 시대, 중산층의 자신감은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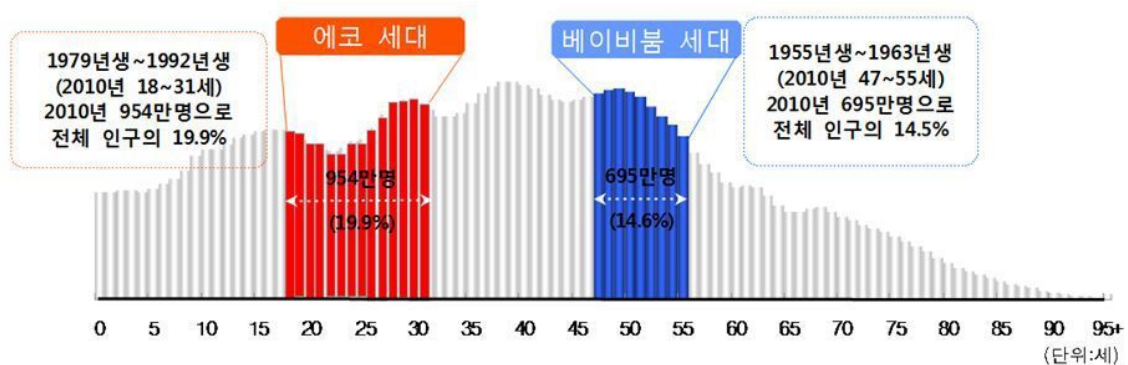
2. 베이비붐 세대 중산층의 희망의 문화는 어디로 갔나

한국 중산층의 존재와 그 행태는 압축적 성장과정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위낙이 빠른 속도로 사회변동이 일어나다 보니, 내생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 근대성을 확장해 나간 서구의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사회변동은 비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세대간 차이가 매우 급격하다. 켜켜이 쌓인 층적토처럼 세대별 단층이 뚜렷해진 것이다.

세대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에 주목하고자 한다. 베이비붐세대는 대체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695만명을 일컫는데,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한다. 반대로 에코세대는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태어난 954만명 가량을 지칭하는데, 현재 전체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두 세대간 차이는 약 25년에서 35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정도의 연령차라면 에코세대의 상당수는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라고 할 수도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한국사회의 중산층을 구성한 주력이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의 폐허를 경험한 노인들은 19세기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세대다. 반면에 베이비붐세대는 식민지에 대한 직접적 기억도 없고,

전쟁의 경험도 없다. 비록 전후 폐허 속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성장했지만, 전쟁 이후의 평등주의적 사회환경에서 활발한 계층이동의 수혜자가 되었다. 식민지에서 작위를 받은 귀족들은 해방후 친일파로 단죄받아서 사회적으로는 사망선고를 받았고, 지주층의 대부분은 농지개혁 과정에서 토지의 대부분을 소작농에게 양도하고 토지증권을 받았다. 식민지시기까지 유지된 토지를 기반으로 한 불평등은 급속히 사라지고, 자신이 경작한 토지의 소출로 먹고살아갈 자영농들이 광범하게 창출되었다. 더구나 전쟁의 폐허 속에 변변한 근대적인 직장이라곤 찾기 힘든 상황에서 기껏해야 은행원이나 교사가 그나마 선망 받는 전문직이었을 따름이다.



[그림 1]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정의 및 규모

모두가 고만고만하게 가난하고 평등한 사회. 이것이 베이비붐세대가 태어나서 성장한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 한국사회의 풍경이다. 이들이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를 거쳐 사회에 진입한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은 2차 석유파동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기도 했지만, 단군 이래 초유의 3저 호황으로 인해 최고의 경제적 활력을 구가한 시기이다. 이들의 청년기는 정치적으로는 억압적 권위주의로 인해 숨이 막혔지만, 경제적으로는 높은 성장의 성과를 용이한 취업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통해 누릴 수 있었다. 매년 7%이상 지속된 고도성장은 일종의 밀물효과를 가져다준 셈이다. 이 시기의 화두는 바로 ‘희망의 문화’를 가진 새로운 중산층의 대두였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은 고도성장의 성과를 전세계에 자랑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인해 벌어들인 외화가 쌓였고, 중화학공업화로 신흥 공업국의 위상이 굳어졌으며, 민주화를 통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이 넘쳐났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새롭게 자리 잡게 된 두터운 중산층이 있었다. 1980년대 한국사회학계에서 중산층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당시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를 두고 젊은 사회과학자들 사이에는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소위 ‘사회구성체논쟁’이라는 것이었는데,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몰락하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한계를 잘 반영하는

논쟁이었다. 그 내용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이 지면에 적절치 않다. 그러나 이 논의의 핵심을 중산층의 역할과 관련해 논의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독점자본주의론’을 주장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에게 중산층이란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의 주도 하에 포섭되어야 할 기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전문가집단이나 자영업자들을 의미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집단으로 폄하되었다.

반면에 ‘주변부자본주의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민중이론’을 강조했다. 전통적인 노동계급으로 흡수되지 못한 채, 급속한 종속적 발전으로 인해 도시의 변두리에 퇴적되기 시작한 빈곤층과 비공식부문 종사자들을 포함하는 제3세계형 저항세력인 ‘민중’이야말로 사회변화의 주역이고, 이들의 정치적인 역량이 곧 사회변혁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시에 이념적 경향이 매우 강했던 사회구성체논쟁에서 중산층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노동계급’에 주목한 독점자본주의론자들이나 ‘민중’의 역할에 주목한 주변부자본주의론자들 모두 중산층은 보수적이며 스스로의 결집력을 결여한 부차적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증가하는 중산층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에 주목한 이들은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 사회학자들이었다. 본래 중산층은 엄밀한 학술적 개념으로 시작했다기보다 매스컴에 의해 호명되면서 일상적 친밀성을 가지고 광범하게 사용된 저널리스트한 조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학계에서는 대체로 중간계급(middle clas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경제학자들은 중위소득계급(middle income class)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마르크시스트들은 유산계급(propertyed class)과 무산계급(propertyless class)이라는 구분을 사용한다. 그래서 중산층이란 조어는 상중하의 정도구분에서 가운데를 의미하는 중(中)이라는 베버리안적 개념과, 자산유무를 나타내는 마르크시스트 냄새를 풍기는 산(産)이라는 개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국적 조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계급론적으로 중산층은 자산의 경제적 소유관계에 따른 구분인 자본가계급 또는 노동자 계급과 대조를 이루는 중간계급이면서, 자산의 분배 과정에 초점을 맞춘 계층론적 개념으로서의 상류층과 하류층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개념적인 엄밀성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믿는 국민들의 비율이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1988년 경제기획원의 사회통계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60%가 중산층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1987년에 비해 8%나 증가한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경향신문 1989.2.3.) 1989년 갤럽조사에서는 국민의 75%가 중산층이라고 응답하였다. (매일경제 1989. 4. 21) 그리고 1989년 5월에 KDI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1.5%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 (경향신문 1991. 1. 9)

그 이후에도 여러 조사들이 보고되지만, 최소 60%, 많게는 80%의 국민들이 스

요롭고 균질적인 대중소비사회의 모범이었다. 일본식 경영에 대한 예찬이 끊이지 않았고, 최고국가 일본 (Japan as Number One)에 대한 에즈라 보켈의 찬사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국민의 80% 이상이 스스로를 중류라고 규정하는 ‘신중간대중론’은 일본인이 모두 안정된 사회에서 중산층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일본의 총중류사회론이 경제적 풍요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이야기했다면, 한국에서 80년대 중산층 논의는 중산층의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당시의 중산층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대체로 중산층의 정치적 지향이 매우 일관되게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높은 비판의식을 가지며, 중산층화할수록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향은 보수와 혁신의 측면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래서 전환기적 상황에서 중산층의 정치적 태도는 여권에 대해서는 온건한 포용자세를, 야권에 대해서는 강경한 도전을 요구하는 것이 강하다고 하여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중산층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

3. 누가 중산층인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산층 개념은 신문과 방송에서는 널리 쓰였지만, 아직도 학술적으로는 그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일상적인 용례와 학술적 정의 사이 격차도 크다. 중산층 개념을 쓰기 주저하는 이들은 ‘중간소득계층’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농민이나 노동자계급과는 달리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성장한 계층이란 점에서 ‘도시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간계급과 도시 및 농촌의 뿌터부르주아 중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 그리고 소득이 높은 상층 노동계급을 포함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OECD에서 제시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중간소득계층이다. 즉,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 ($=\text{가처분소득}/\sqrt{(\text{가구원수})}$)이 가장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값의 50%에서 150% 사이의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4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67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가구수는 954만가구로 전체가구의 59%이며, 가구원까지 포괄하면 2,722만명으로서, 60.8%에 해당한다.

실제로 OECD 방식으로 중산층을 판별해 낼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수준만으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중산층 개념과 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할 때는 중위소득 기준 50%에서 200% 사이 어느 구간을 정하여 활용하는 반면, 실질적인 함의를 갖는 중산층 개념을 원하는 정치권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원한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는 중산층을 정의하기 위해 주택소유, 자녀 대학교육, 의료보험, 퇴직연금, 가족휴가 등의 요소를 고려했고, 프랑스의 퐁피드 정부에서는 1개 이상의 외국어 구

사 능력, 스포츠 활동, 악기연주능력,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였다. 영국에서는 페어플레이정신, 신명의 소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항하는 사람 등을 중산층의 요건으로 삼는다

적극적으로 중산층 개념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중산층이 ‘계급’이나 ‘소득계층’ 보다는 ‘지위집단’에 가깝다고 본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를 중심으로 한 계급개념이나 단순한 소비수준의 정도를 의미하는 소득계층보다는 ‘생활양식, 공식교육, 직업적 위세, 소비의 취향과 능력 등을 공유’하는 동질적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는 것이다.

아마도 처음으로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한국적 맥락에 적용한 이는 한상진교수일 것이다. 그는 1987년에 발표한 ‘한국 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라는 논문에서 중산층의 규모를 본격적으로 추정하였다. 1981년과 1986년에 실시된 경제기획원의 사회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하되, 직업, 수입, 교육, 주택의 네가지 변수를 이용했다.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중산층이라고 판정된 비율은 1981년에 비농가 가구 중 36.1%였는데, 85년에는 41.1%로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중산층이 단일한 기준보다는 복합적인 척도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 후 중산층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해 내느냐하는데 대해 본격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홍두승 교수가 제안한 기준, 즉 계급, 소득, 교육수준 및 주택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절충하는 방식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다.

이 방법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계급적으로는 신중간계급인 화이트칼라층과 구중간계급을 대표하는 자영업자층을 포괄하고, 소득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소득의 90% 이상을 얻는 이들을, 학력으로는 초대졸 이상을, 그리고 주거의 측면에서는 30평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월세부담을 하는 가구를 골라낸 후, 이 네가지 조건 중 세가지 이상을 충족시키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판별해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이 가진 문제점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절충적이고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의에 따른 경우에 객관적인 조건에서 중산층에 해당하는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에 한국사회학회의 중산층 조사자료를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한 조동기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60~70%정도를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중 30~40%는 핵심적 중산층에 속한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업에 따른 계급적 지위, 교육수준, 가구소득,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산층 점수를 구한 후, 그 분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들을 중산층으로 구별해 내었다. 먼저 계급적 지위와 관련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1점을 주고, 임금근로자는 0점을 주었다. 또한 신중간계급으로서 전문직과 관리직은 2점을, 반전문기술직은 1점을 주었다.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 졸업이상을, 가구소득에서는 월평균소득 400만원 이상을, 그리고 주택규모에서는 30평 이상인 경우에 1점씩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3점 이상인 경우는 핵심적 중산층으로, 2점은 주변적 중산층으로, 그리고 1점 이하는 하층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2.8%가량이 중산층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중 핵심적 중산층은 34.05%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본다면, 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수준과 생활조건을 고려할 때 중산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의 비중은 지난 30여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고 해도 과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 중산층 의식의 실종과 성장의 ‘사회적 한계’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객관적 지표로 중산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80년대 후반에 전체 인구의 60-80%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했다면, 90년대 중반에는 42%가 그렇게 인식했고, 2006년의 한국사회학회 조사에서는 20%만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했다. 2013년 조사에서도 그 비중이 20.2%에 불과하다.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중산층 귀속감은 축소되어 온 것이다.

[표 1] 객관적 분류에 따른 계층별 주관적 중산층 귀속감 (2013년 조사)

	하층	주변적 중산층	핵심적 중산층	전체
비율	8.7%	15.0%	33.3%	20.2%

2013년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 계층구분과 주관적인 중산층 귀속감 간에도 큰 격차가 있다. 하층으로 분류된 이들 가운데는 8%만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했다. 이는 이해할만한 사실이다. 직업도 낮고 교육수준도 낮으며, 소득이 적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이들이 중산층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객관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허위의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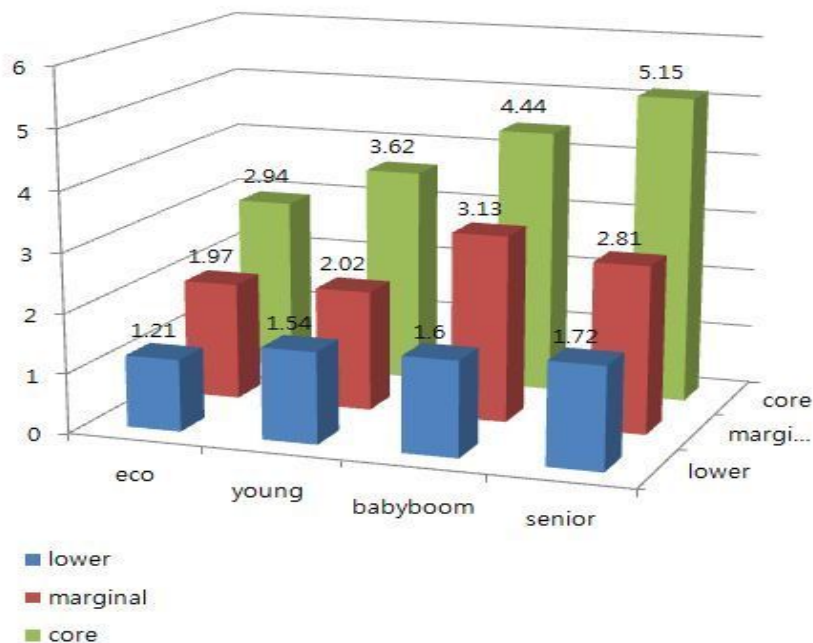
그러나 주변적 중산층 중에서는 15%만이, 그리고 핵심적 중산층 중에서도 33%만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긴다는 것은 심각한 자학증상이라 여겨진다. 객관적으로는 팬층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이들조차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30평 이상의 주택에 살고, 우리나라 평균소득의 90% 이상을 벌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반전문직 이상의 직업을 가지는 이들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한국인의 평균적인 생활을 하는 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매우 비현실적으로 상승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들의 자산을 중산층이라 부리는 이들의 자산과 비교해 보았다. ‘중산층이라 부리려면 부동산이나 주식, 저축 등을 모두 합해서 평균 얼마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평균

10억 9천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놀랍게도 계층 간에 의견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핵심적 중산층이 11억 8천만원을, 주변적 중산층은 10억 8천만원을, 하층은 10억 천만원을 중산층으로 분류되기 위한 최소 자산 기준이라 대답하였다. 아울러 ‘중산층이라 불리려면 한달 평균 얼마나 벌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월567만원은 벌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이 경우에도 계층간 의견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핵심적 중산층은 620만원을, 주변적 중산층은 565만원을, 그리고 하층은 519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 합쳐 순자산이 6.6억원은 되어야 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월평균 가구 소득은 평균 515만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흥미롭게도 중산층은 평균 3.7억원짜리 34.9평 이상의 주택을 가져야 하고, 한 달 평균 341만원의 생활비를 사용하며, 한달 평균 4회 이상 외식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 후원하고, 1년에 최소 3.5회 무료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해있는 계층적 위치가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표준화된 중산층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매우 규격화된 위계가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마치 일정한 지위에 오른 사람은 50평 이상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 되는 차를 타야한다는 암묵적인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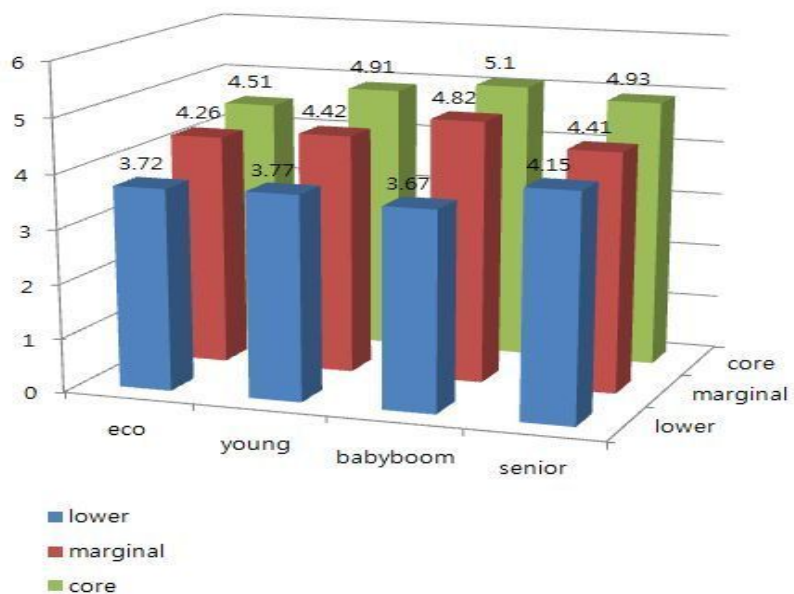


[그림 3] 계층 및 세대별 가구 자산 (단위:억원)

적 기대가 존재하듯이, 2013년의 조사에서는 자산은 10억, 연봉은 7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광범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함이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런 정도의 자산과 연봉을 가진 이들은 실제로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적 자산은 3억 1,495만원이며, 부채는 5,291만원으로서 평균적인 순자산은 2억 6,203만원이다. 그 중 10억 이상을 보유하는 가구는 4.2%에 불과하다. 전체 가구의 절대다수인 71.1%는 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따름이다.

2013년 본 연구팀의 조사에서도 자산의 측면에서 계층별 실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핵심적 중산층에 해당하는 이들은 세대별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가구의 자산이 노인세대의 경우에는 5억원이 넘고, 베이비붐세대는 4억4천, 에코세대도 2억9천만원 이상을 소유한 이들이다. 반면에 하층의 경우에 베이비붐세대는 1억6천만원, 에코세대는 1억 2천만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핵심적인 중산층에 속하는 이들도 중산층에 관해 매우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4] 계층 및 세대별 주관적 재산 지위 귀속감 (10점 만점)

반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혹은 적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1에서 10까지의 척도 중에 중간을 의미하는 5점 아래로 응답하여, 스스로의 재산지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계층이나 세대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 가구소득을 보면 2011년 평균 가구소득은 4,233만원이며, 취업

자의 평균 개인소득은 2,826만원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 소득의 분포에서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6.5%에 불과하다.

[표 2]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분포

(단위 : %, %p)

순자산액(억원)		-1 미만	-1~0 미만	0~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5 미만	5~6 미만	6~7 미만	7~8 미만	8~9 미만	9~10 미만	10 이상	평균 (만원)	중앙값 (만원)
가구 분포	2011	0.3	3.1	39.3	20.3	12.5	8.1	4.5	3.1	2.1	1.4	1.0	0.9	3.4	24,560	13,026
	2012	0.2	3.0	37.9	20.5	12.8	7.8	5.0	2.9	2.2	1.5	1.3	0.8	4.2	26,203	13,818
	전년차(비)	-0.1	-0.1	-1.4	0.2	0.3	-0.4	0.5	-0.1	0.1	0.1	0.3	-0.1	0.7	6.7	6.1

일인당 국민소득이 5천달러가 채 되지 않았던 1980년대 중산층 귀속감이 60%를 넘어 80%까지 치솟았던 반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를 넘보는 사회에서 오히려 중산층 귀속감은 모두 사라지고, 자산이나 소득기준으로는 상위 4%에서 6%사이의 최상층만을 중산층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은 중산층이 아닌 ‘서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극도로 과장된 서민의식이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객관적 생활조건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위사람들과의 격차가 더 크게 인식되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산층 의식의 소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가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보다는 불행감을 증대시키고, 자살률을 높이며, 계층적 자신감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경험은 영국의 경제학자 허쉬 (Fred Hirsch)의 표현을 빌리면 ‘성장의 사회적 한계’로 설명가능하다.

허쉬는 물질적 풍요를 이룬 1970년대 영국사회에 주목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세 가지 경향성이다. 즉, 경제적 성취가 모든 사람들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다수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자 대부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하게 되는 ‘풍요의 역설’이 그 첫 번째 증상이다. 대다수에게는 성장을 통해 파이를 크게 하는 것이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파이를 나누는데 집착하게 되는 ‘분배에 대한 집착’이 그 두 번째 증상이다. 그리고 성적인 기호나 미학적 취향에서는 극단적 개인주의로 치닫는 현대 사회에서 유독 경제영역에서만은 집단주의적 사고나 국가규제에 대한 요구가 더 보편적이 되어버리는 ‘비자발적 집단주의’가 그 세 번째 증상이다.

허쉬의 설명은 경제성장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물질재(material good)의 공급이 가져다주는 밀물효과는 그 효과를 상실하게 되고, 지위재(positional good)의 중요성이 증대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장에는 사회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위재는 그 가치가 거의 전적으로 다른 대안이나 타인의 선호체계에 의해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러한 지위재는 지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예를 들면 높은 사회적 지위는 제한된 자리만 가능하지만, 이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다. 지난 30여년을 돌이켜보면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간 세대경험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물질재와 위치재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세대가 성장하던 시기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255달러(1970년)에서 2,355달러(1985년)에 불과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동남아시아의 저발전국가들이나 베트남 수준의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물질적 결핍을 해결하는 일이 중요했고, 빠른 고도성장은 이러한 물질재에 대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해주는 해답을 제공했다.

베이비붐세대의 대학진학률은 30%에 불과했다. 당시 급격히 팽창하던 한국경제를 생각해 보면, 대졸자들은 무한 팽창하는 노동시장에서 귀한 몸값을 받는 존재였다. 대학입시를 둘러싼 경쟁이 존재했지만, 졸업 후 취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대학진학률의 폭증을 가져왔다. 물론 여기에는 1990년대 초반 문민정부의 대학설립준칙주의가 크게 기여를 했다. 대학의 숫자와 정원이 폭증한 결과 에코세대의 대학진학률은 70%에 달했다. 그러나 모두가 대학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대학진학을 둘러싼 경쟁이 수그러든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경쟁은 치열해졌다. 선행학습의 열풍이 불어 고등학교 과정을 중학교 과정에서 이수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앞서기 경쟁이 광범하게 번졌으며, 이러한 경쟁은 사교육을 통한 경쟁을 더욱 촉진시켰다. 당연히 정상적인 공교육의 기능은 기형적이 되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레드퀸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뛰는다고 해도, 옆에서 뛰는 이들이 함께 열심히 달리면, 나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은 취업시장에서도 재현되었다. 대량으로 배출되는 대졸자의 숫자는 급증한 반면, 이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팬찮은 일자리, 즉 대기업의 전문직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와 대졸 구직자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장광수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1996년까지만 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535만개인 반면, 대졸 노동력은 497만명에 불과해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채우지 못했던데 반해, 2010년에 이르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수는 581만명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 대졸 노동력은 965만명에 달해 거의 400만에 가까운 초과 인력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자리와 노동력간의 불일치는 결과적으로 에코세대에서 청년실업자를 증가시키고,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NEET족의 증대를 가져왔다.

취업을 한다고 해도 주거라는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10%에 달한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원하는 곳, 대도시에 집을 마련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표준화된 전세지수를 비교하더라도, 1986년에 비해 2011년 기준으로 명목적 가격은 6.9배나 늘어났고, 실질적인 비용도 2.3배에 달한다.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에코세대의 주거난

이 훨씬 심각한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가 가져온 효과 중 하나는 미혼의 증가다. 20대 후반 여성 중 미혼자의 비중이 1995년에는 29.6%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69.3%로 급증했다.

베이비붐세대가 사회에 진출할 때와 비교해보면 풍요의 역설은 단지 심리적인 박탈감 때문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인 혼잡(social crowding)에 비유할 수 있다. 마치 도심에 자동차가 밀집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지위나 역할에 너무도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게 되면 사회적 혼잡이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 혼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체 재화나 서비스 등의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지위를 둘러싼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정 지위를 둘러싼 경쟁은 늘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어떤 지위를 향해 줄을 서느냐에 의해 사회적 혼잡의 양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표 3]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비교

	베이비붐세대 (1955-1963)	에코세대 (1979-1985)
인구수	695만명	510만명
2012년 상황	은퇴기 (만58-50세)	진입기(만27-33세)
성장기 GNI	\$255(70년) → \$2,355(85년)	\$11,735(95년)→\$20,562(10년)
대학진학률	30%	70%
주거비용 (표준화전세지수)	(명목 1.0)(실질 1.0) 1986년 기준	(명목 6.9) (실질 2.3) 2011년 기준
취업상황	인력난	취업난(NEET비중 20-15%)
20대 후반 여성 미혼	29.6% ('95)	69.3% ('10)

출처: 박덕배, 에코부머의 3대 경제난, 현대경제연구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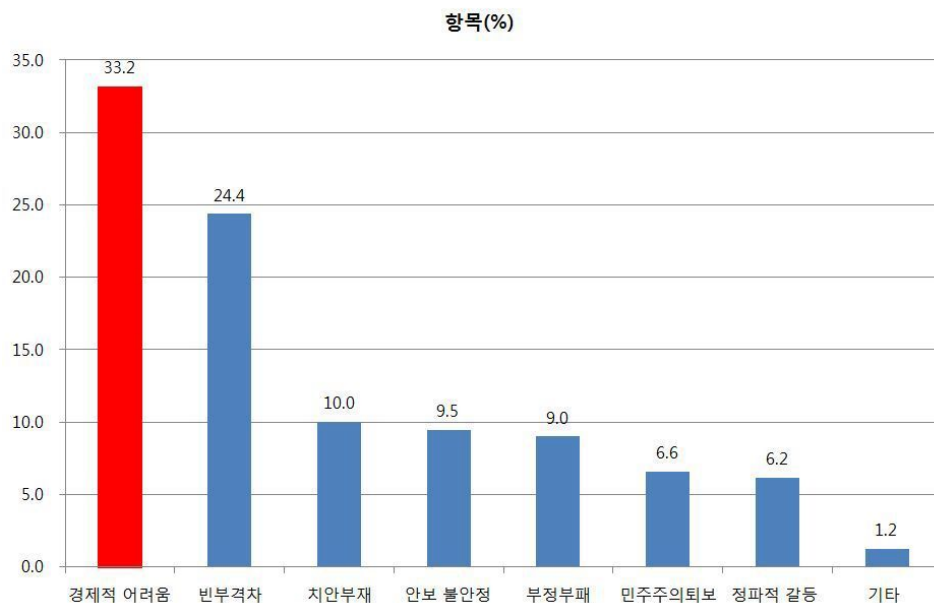
에코세대에게 사회적 혼잡이 발생한 곳은 대졸자들이 기대하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대기열(queue)이다. 반면에 고졸자들과 저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나쁜 일자리를 위한 대기열은 텅비어 있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과 연수생들이 채우고 있다. 이같은 일자리를 둘러싼 심각한 불일치는 그동안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벌어진 교육정책 중에 선별(screening)의 실패를 반영한다.

모두가 가난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제한된 대학정원을 둘러싸고 경쟁한 베이비붐세대에게 교육은 놀라운 상승이동을 가능케 하는 창구였다. 한때 온 나라를 뒤덮었던 무우죽 파동과 같은 치맛바람도 역설적으로 교육을 통한 상승이동의 효능감이 그만큼 높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급의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해법으로 택한 대학정원의 확대와 대학설립 자율화로 인해 명문대학을 둘러싼 사회적 혼잡은 오히려 격화시켰고,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

5. 희망격차, 새로운 불평등

현재 한국인의 생활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이슈이다. 그만큼 풍요로운 사회에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은 더 늘어났다. ‘요즘 걱정하는 것 중 두 가지를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골라 달라는 질문에 대해 1순위로 언급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 (49.4%)과 빈부격차의 심화 (18.5%)의 순이었고, 2순위로 언급된 것들도 빈부격차의 심화(30.3%)와 경제적 어려움 (16.9%)의 순이었다. 그래서 1순위와 2순위로 언급된 것들을 모두 합하여 평균을 내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한 응답이 3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빈부격차로 24.4%, 치안부재 (10%), 안보불안정 (9.5%), 부정부패 (9%) 등의 순이었다.

[그림 5]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 (1순위와 2순위 선택비율의 합계)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은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던 국가적인 것이던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3년 전에 비해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다.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도 17.9%에 달했다. 앞으로 3년 후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8.2%로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지는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도 6.7%나 나왔다.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에서 특히 핵심적 중산층에서는 55.56%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층에서는 43.6%만이 그렇게 응답하여, 계층간 희망의 격차가 10% 이상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가 3년 전에 비해 좋아졌느냐는 데 대해서는 22.2%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다 부정적이었고,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은 28.1%에 달했다. 3년 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

답은 41.3%로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보다 부정적인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도 11.5%나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전망에서 핵심적 중산층의 49.2%, 주변적 중산층의 48.8%가 나아질 것이라 전망한 반면, 하층의 경우에는 33.5%에 불과해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도 계층 간 희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개인의 경제생활 변화 (%)

	3년전에 비교한 현재			3년 후 예상		
	나빠졌다	변화없다	좋아졌다	나빠질 것이다	변화없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전체	17.9	55.6	26.5	6.7	45.1	48.2
핵심적 중산층	9.1	51.2	39.7	5.2	39.3	55.6
주변적 중산층	22.1	51.6	26.3	6.6	38.5	54.9
하층	22.6	52.7	24.7	7.6	48.7	43.6

한편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과거 회고와 미래전망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났다. 본래는 매우 나빠진 경우 1, 매우 좋아진 것을 5로 하는 응답을 0을 기준으로 하여 좋아진 경우 양의 값을, 나빠진 경우 음의 값을 갖도록 평균을 이동하여 코딩한 결과 공정성이나 사회통합, 균등한 교육기회 등 한국사회의 운영 원리에 해당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늘어난 반면, 경제적 현실에 해당하는 항목들, 예를 들면 취업기회, 고용안정성, 소득분포의 형평성, 계층상향이동의 가능성 등에서는 3년 전과의 비교에서도 나빠졌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사실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평가에서는 계층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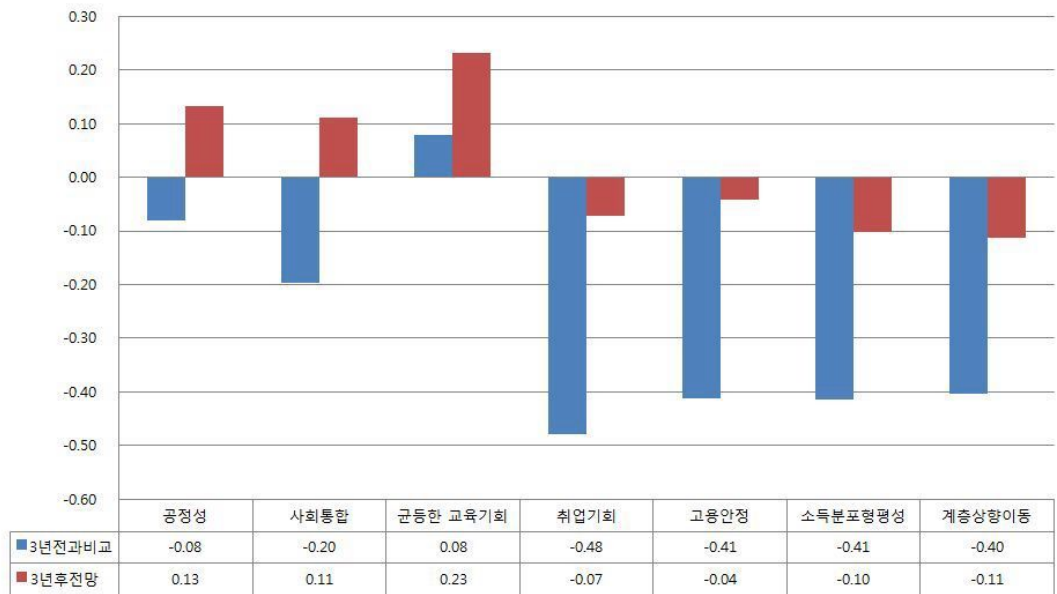
[표 5]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

	3년전과 비교한 현재			3년 후 예상		
	나빠졌다	변화없다	좋아졌다	나빠질 것이다	변화없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전체	28.1	49.7	22.2	11.5	47.2	41.3
핵심적 중산층	26.6	44.8	28.6	10.7	40.1	49.2
주변적 중산층	25.4	53.0	21.6	13.2	38.0	48.8
하층	32.7	46.6	20.7	13.8	52.7	33.5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개인적 전망과 전체사회에 대한 전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전체사회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비관적이다. 지난 3년간 경제상황이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그 결과 취업기회가 줄었고, 고용안정성이 악화되었으며, 소득분포의 형평성이 줄고, 계층의 상향이동도 줄어들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3년간의 전망에 있어서는 희망적 의견

이 더 우세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항목들, 즉 취업기회나 고용안정, 소득형평성이나 계층이동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약간 더 강했다.

[그림 6] 3년 전과의 비교 및 3년 후에 대한 전망



반면에 개인의 경제생활 전망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기대가 강했는데, 여기서는 계층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는 주로 공정성이나 균등한 교육기회, 사회통합의 가능성 등과 같이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전반적인 원칙과 규범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계층간 희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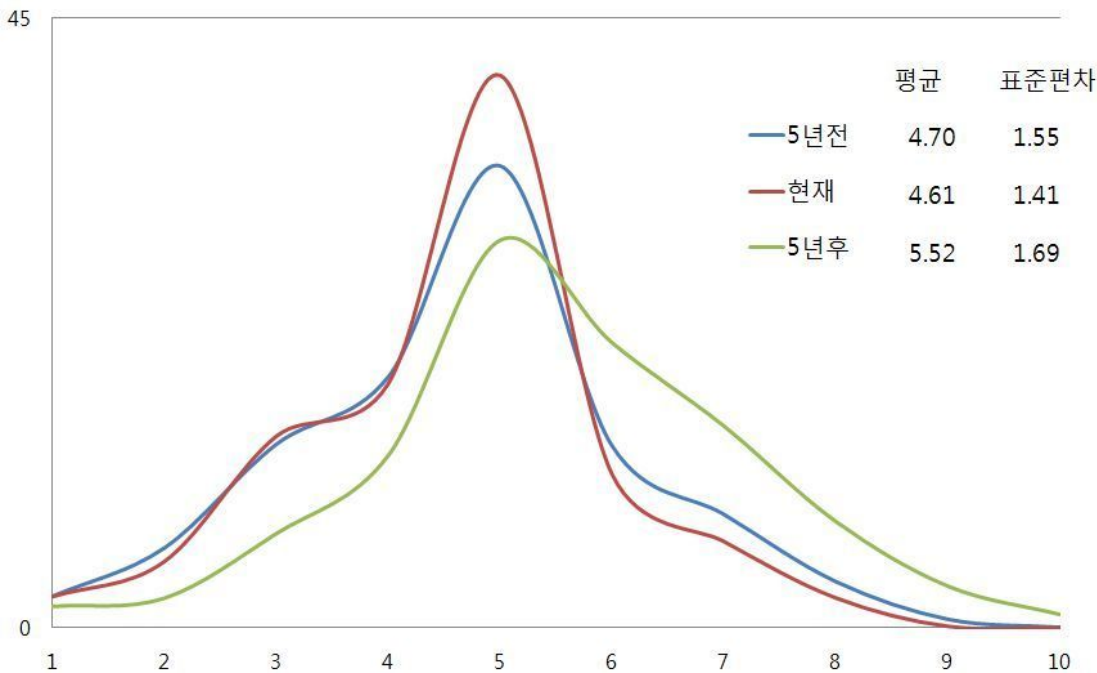
다른 항목들에서도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개인이나 가족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교차한다. ‘한국사회가 10년 후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늘어나서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77%를 넘은 반면, ‘중산층이 늘어나고 빈곤층이 점차 줄어들어 빈부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0.1%에 불과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빈부격차에 대한 우려가 많은 가운데 미래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 6] 10년 후 빈부격차에 대한 예상

항목	빈도	%
중산층은 늘어나고 빈곤층은 점차 줄어들어 빈부격차가 완화될 것이다.	210	20.87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늘어나서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775	77.04
모름/무응답	21	2.09
합계	1006	100.00

‘한국사회를 10개의 층으로 나눈다면 귀하의 가정은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를 질문하여 상대적인 가족의 위치를 10점 위계상에서 표시하도록 한 결과, 5년 전에 비하면 현재 상층이 줄어들고 평균 점수는 4.7에서 4.6으로 하락하며, 표준편차도 1.55에서 1.41로 줄어들어 중간값에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데 5년 후 예상하는 변화에서는 평균값은 5.52로 크게 늘어난 반면, 표준편차도 1.69로 매우 커졌다. 전반적으로 계층지위가 늘어날 것으로 반응했지만, 그 반응의 양상에서 상층과 하층간의 희망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이다. 희망을 가진 상층부는 더 희망적이 되고, 희망을 포기한 하층은 더 절망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그림 7] 가족의 상대적 계층지위 변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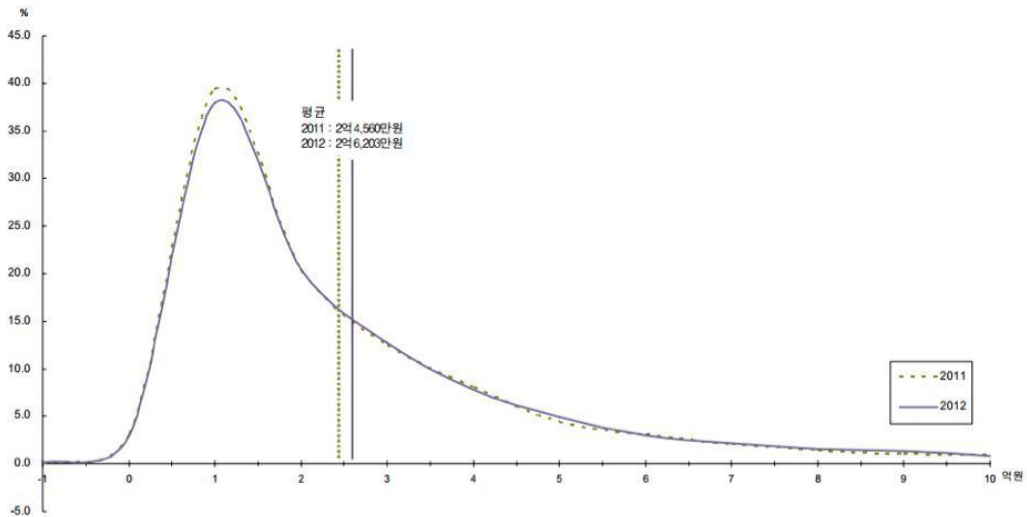


6. 인맥 자산의 중요성과 공정성 논란

사회적 불평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산과 소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자산과 소득은 실직이나 질병, 은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스톡(stock)과 플로우(flow)로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의 측면에서 계층별 복원력은 큰 차이가 난다. 핵심적 중산층에 해당하는 이들은 노인세대의 경우에는 5억원이 넘고, 베이비붐세대는 4억4천, 에코세대도 2억9천만원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난다. 반면에 하층의 경우에 베이비붐세대는 1억6천만원, 에코세대는 1억 2천만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그림 8]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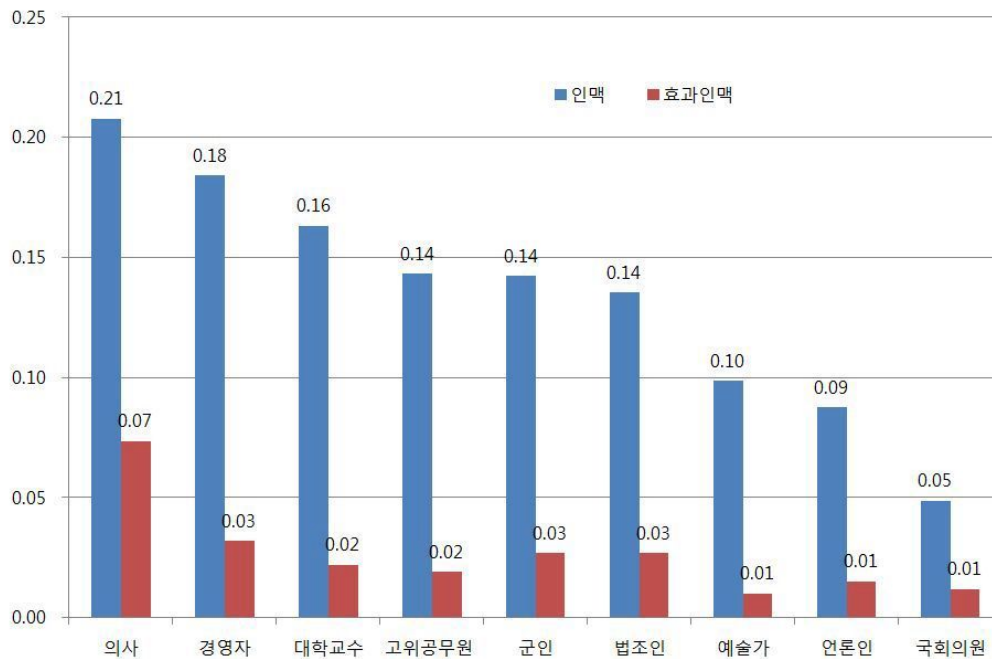
있다. 계층간 자산의 불평등은 특히 심하다. 그래서 자산분포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긴 꼬리 분포를 하고 있다.

소득의 분포는 자산의 분포에 비하면 극단적이지 않다. 2011년 평균 가구소득은 4,233만원이며,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 758만원, 2분위는 1,988만원이며,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021만원, 1억 65만원이었다.

그 외 중요한 복원자산으로 그동안 주목하지 않은 요인으로 인맥을 들 수 있다. 인맥이란 한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고 중에 중요한 정보나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연고적 동원능력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족 혹은 8촌 이내 친지나 친한 친구, 동창 중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 언론인, 의사, 경영자, 군인과 경찰, 예술가, 국회의원 등이 있는지’를 물어서, 잠재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대상의 숫자를 합산하여 인맥자산으로 정의하고, 그 중에 실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다면, 그 합을 효과인맥자산이라고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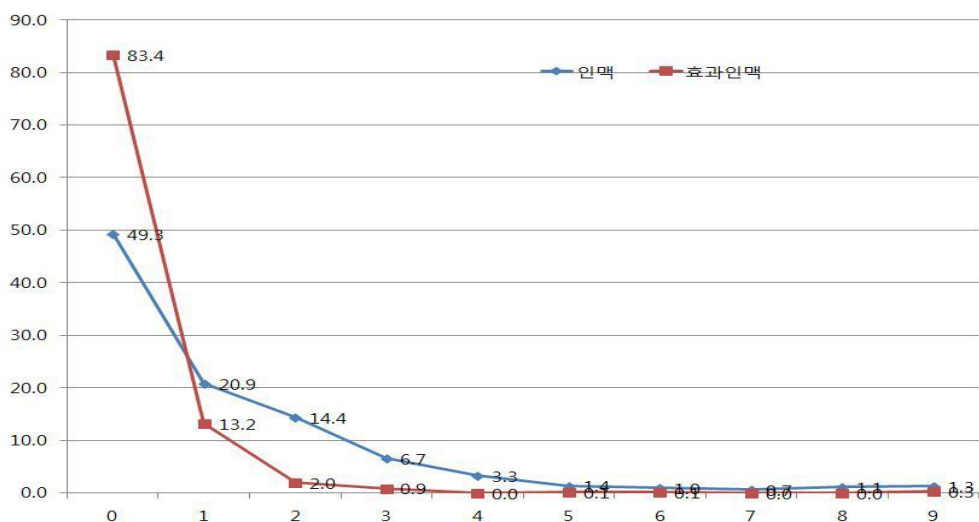
전체 가용한 중요한 타자 집단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 인맥으로 언급한 직업군은 의사 (21%) 경영자 (18%) 교수 (16%), 고위공무원 (14%), 군인과 경찰 (14%) 법조인 (14%) 등의 순이었고, 언론인(9%)과 국회의원 (5%)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실제 인맥의 중요성을 판단하려면, 이들 직종의 규모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낮다고 하여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전체 중요한 타자집단 중 실제로 국민들이 직접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대상, 즉 효과인맥자산으로 꼽은 이들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사(7%), 법조인 (3%), 경영자 (3%), 군인과 경찰 (3%) 등의 순이었다.



[그림 9] 인맥과 효과인맥의 대상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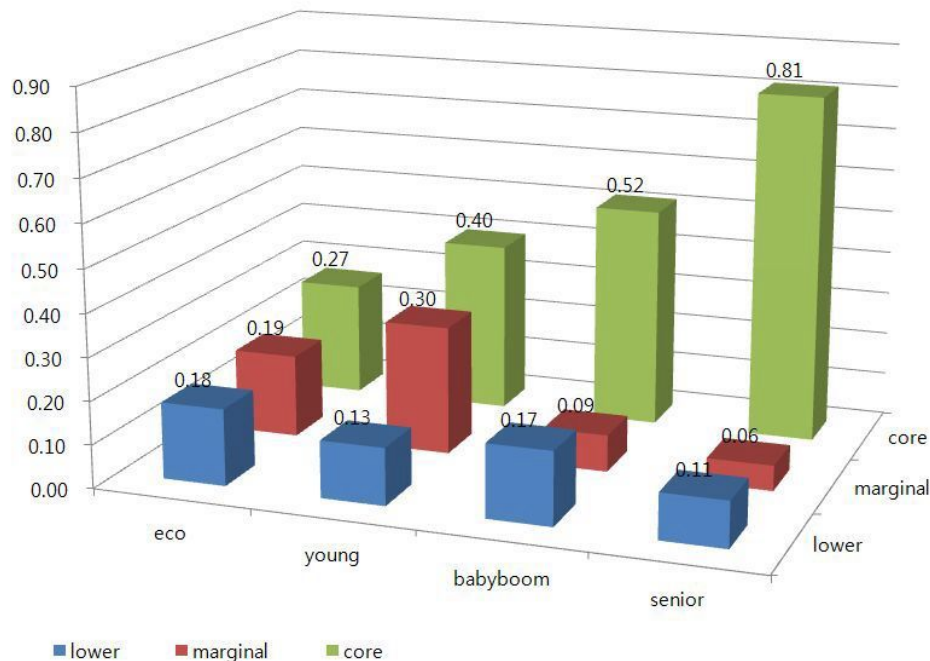
한편 응답자들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한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인맥자산이나 효과인맥자산은 0에서 9까지의 값을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경제적 자산의 분포와 비교해 보면 인맥자산이나 효과인맥자산의 분포는 훨씬 더 불평등하다. 전체 응답자 중 거의 절반인 49.3%는 도움받을 인맥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실제 도움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무려 83.4%에 달했다. 한번이라도 인맥의 도움을 얻은 사람은 16%였고, 2번 이상 도움을 받은 이는 3%내외에 불과했으며, 9번 도움을 받은 이는 0.3%에 불과했다. 효과인맥자산의 지니계수는 0.815에 달한다. 통계청의 가계금



[그림 10] 인맥과 효과인맥의 분포

유희복지조사에 따르면 2012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6이었다. 소득의 지니계수는 대체로 0.3~0.35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맥자산의 분포는 소득이나 자산의 분포에 비해서도 훨씬 불평등한 것이다.

인맥자산이나 효과인맥자산은 세대와 계층에 따라 매우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가장 효과인맥자산을 많이 동원한 것은 노년층의 핵심중산층으로서 0.8회 달하며, 핵심중산층 중 베이비붐세대는 0.52회, 에코세대는 0.27회에 이른다. 반면에 주변적 중산층이나 하층의 경우에는 세대와 무관하게 0.1~0.3회에 그치고 있어서 중장년층 핵심중산층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 계층 및 세대별 효과인맥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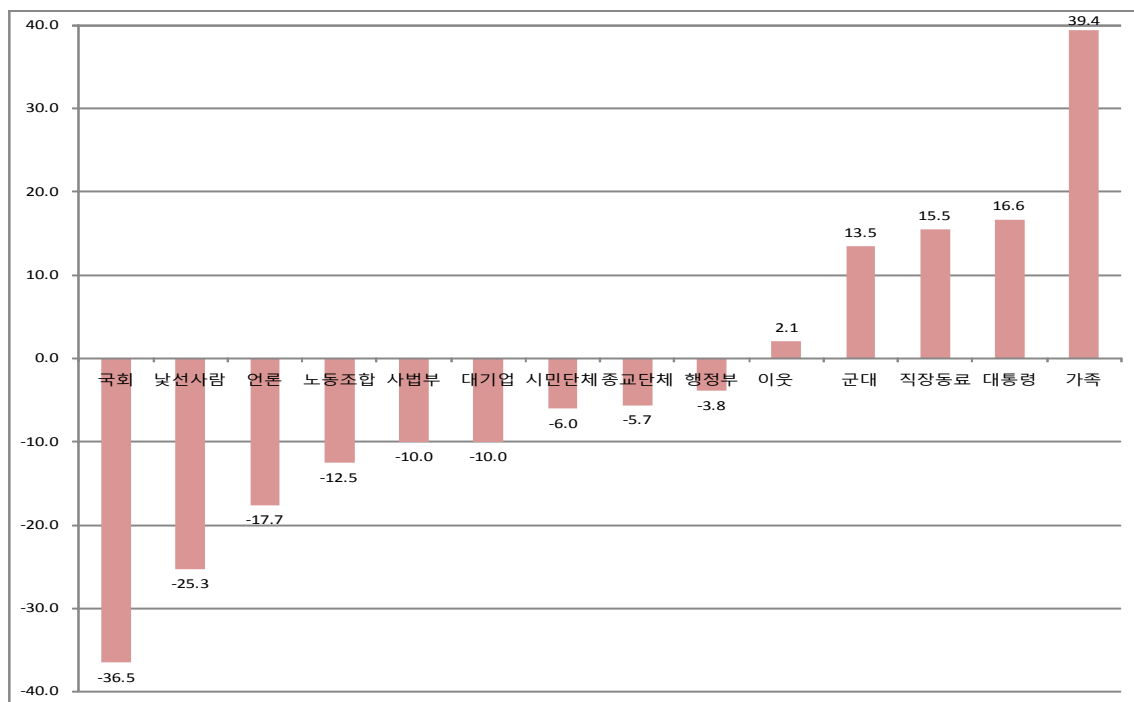
인맥자산이 계층에 따라 매우 불평등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한국사회의 자원 배분과 규칙의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라 끊임 없이 타협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암시하는 것이다. 최근 세월호 침몰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증상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인맥 활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연고주의라는 문화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문제는 엘리트층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원 가능한 인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고주의는 그저 따뜻한 미풍양속일 따름이다. 그러나 각 부문 조직의 정상에 위치한 엘리트들에게 연고주의적 인맥동원은 유착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부패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권위주의 체제에서 성행하는 독재형 부패와 다르고,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동시에 일어나는 필리핀이나 태국의 족벌형 부패와도 다른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

주화를 통해 중앙권력에 의한 독재형 부패는 사라졌지만, 투명성이 개선되지 않고, 인맥동원을 중시하는 연고문화는 온존되어 사회의 각 상층에서 광범하게 회전문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간의 사정은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의 강원택 교수의 글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의 사회적 규범을 만들고 집행하며 위반자를 처벌하는 기관들에 대한 불신은 깊고, 오래 되었다.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신이 강하고 가족에 대한 신뢰는 매우 강해서,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격차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림 12] 제도 및 사람에 대한 신뢰 비교 (-100~100의 값을 갖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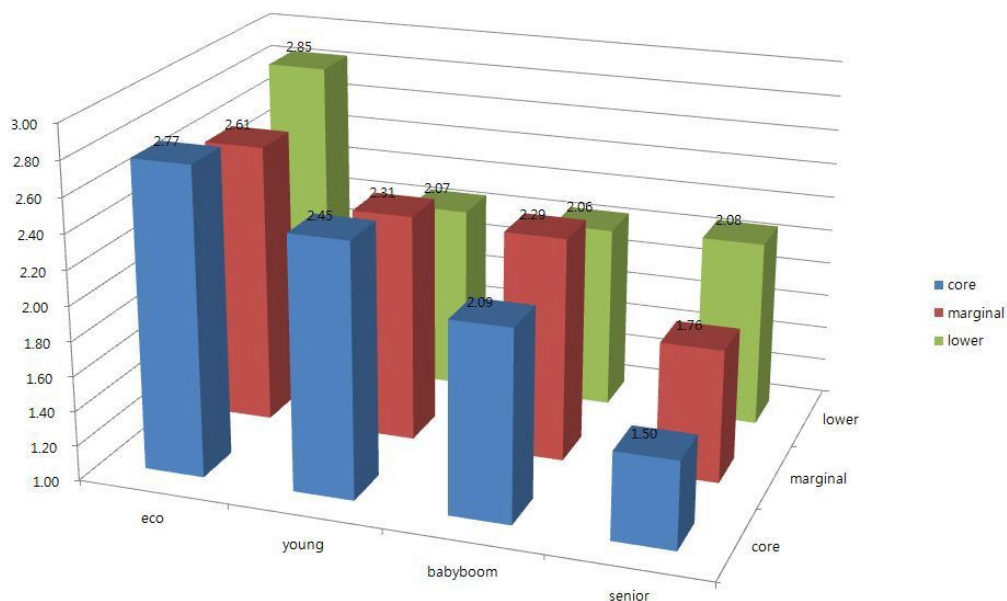
7.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변화의 단초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중산층 의식의 소멸은 고도경제성장과 민주화가 가져온 성공의 위기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성숙되고, 정치적으로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것을 가능케 했던 물질재의 확산에 뒤이어 중요해진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의 단계에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합의와 운영의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회변화가 수반하는 경제적 불평등 구조

의 변화는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더 많은 성장을 통해 더 많은 물질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한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진입한 단계는 더 이상 ‘물질마 성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욕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희소성을 지닌 사회적 지위를 둘러싼 경쟁이다. 더 많은 물질재를 공급으로 해소되기 보다는 집합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다. 복지의 문제는 대표적이다. 이제는 사회에서 도태된 특정 집단을 위한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애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들에 대비하여 대응력과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왔다.

또한 이제는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시험준비를 해서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 현재의 무한경쟁의 구조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뒤지는 보상을 주는 직업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졸자들이 급증한 이후 에코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는 직장인 보수가 과거 베이비붐세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받던 보수와 비교해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러한 지위재를 둘러싼 무한경쟁의 한계와 폐해를 잘 보여준다.

대안은 어디에서 있을까? 그 시작은 새로운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탈물질주의적인 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중산층이 등장한 배경과 중산층이 갑자기 소멸한 이유는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물질주의적 욕구의 확산이 충족되었을 때 중산층 의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1997년 이후 급속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채 급속히 추락하는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일종의 생존



[그림 13] 계층 및 세대별 탈물질주의의 분포

자 증후군과 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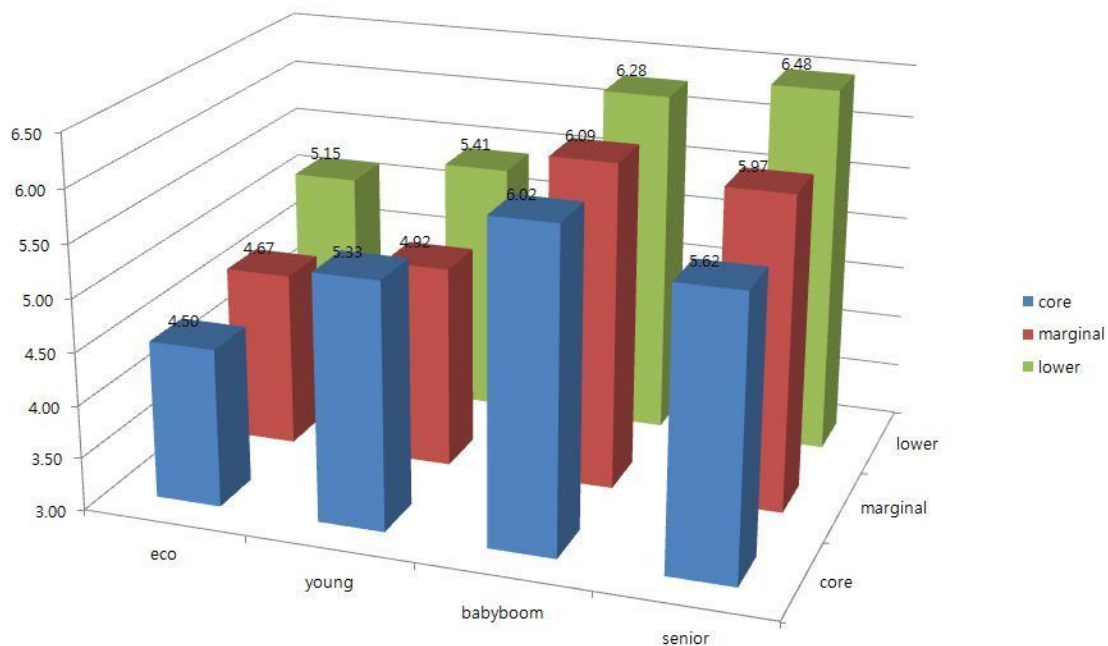
그동안 성장시대를 함께 한 물질주의는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며,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제안정과 사회질서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이었다.

반면에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직장과 사회에서 개인의 참여나 발언권의 확대, 환경에 대한 관심, 언론의 자유, 정부정책결정에서 국민의견의 수렴 등과 같이 조금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며, 돈보다도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의 가치관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가치관, 즉 탈인습적이고 탈권위적이며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공존과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에코세대에게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리고 세대간의 차이는 계층간 차이를 넘어선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젊은 세대는 한국사회의 과거에 비해 현재를, 그리고 현재에 비해 미래를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훨씬 긍정적이고, 밝게 인식한다.

반면에 정치적 이념을 기준으로 하면, 노년층으로 갈수록 보수적 태도가 증가한다. 특히 베이비붐세대와 이전세대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반면에 중산층과 하층간에는 이념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하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보수적인 태도가 더 강화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사회적 이념지형의 분포로 보아 하층으로 갈수록 보수적 태도가 더 강하다는 것은 한국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80



[그림 14] 계층 및 세대별 보수성향의 분포

년대 이후 중산층이 오히려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민주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중민(中民)이론적 해석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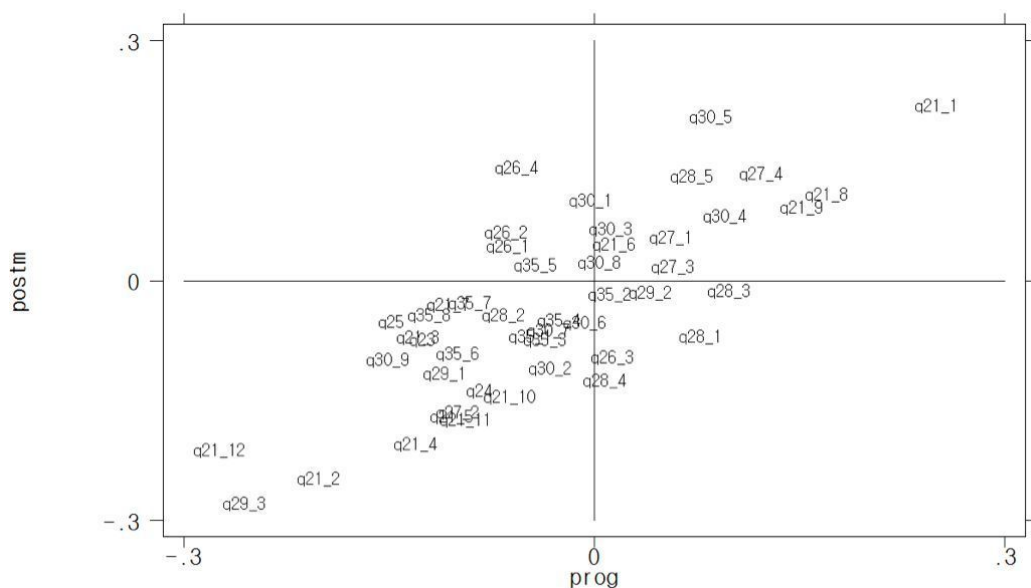
탈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진보적 가치관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우선은 정치적 이념성향, 경제적 태도, 사회문화적 태도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 태도와 탈물질주의적 가치관 간의 상관관계를 구해 보고 동시에 이들 태도와 진보적 태도와 의 상관관계를 구해보았다. 그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탈물질주의와 진보적 태도는 상당한 정도 중첩된다. 각각의 태도지표들과 탈물질주의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각각의 태도지표들과 진보적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769에 이른다.

탈물질적 태도와 진보적 태도가 동시에 강하게 드러나는 항목들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대학교육에 대한 무상지원,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반대 등의 항목이었다.

반면에 보수적이며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동시에 강하게 반영하는 태도로는 한미 동맹의 강화,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이민을 떠나는 것은 반대, 공기업을 민영화, 학교체벌 허용, 빈곤층은 게으른 존재라는 인식, 여가보다는 일을 우선시하는 태도 등이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더라도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아울러 진보적이면서도 물질적 가치와 밀접히 연관된 것은 ‘경제적 보수는 능력보다 근속연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동안의 변화를 추적해보면 희망적 중산층 문화가 형성된 1980년대 말과 90년대의 주역은 베이비붐세대였다. 이들은 결핍속에서 태어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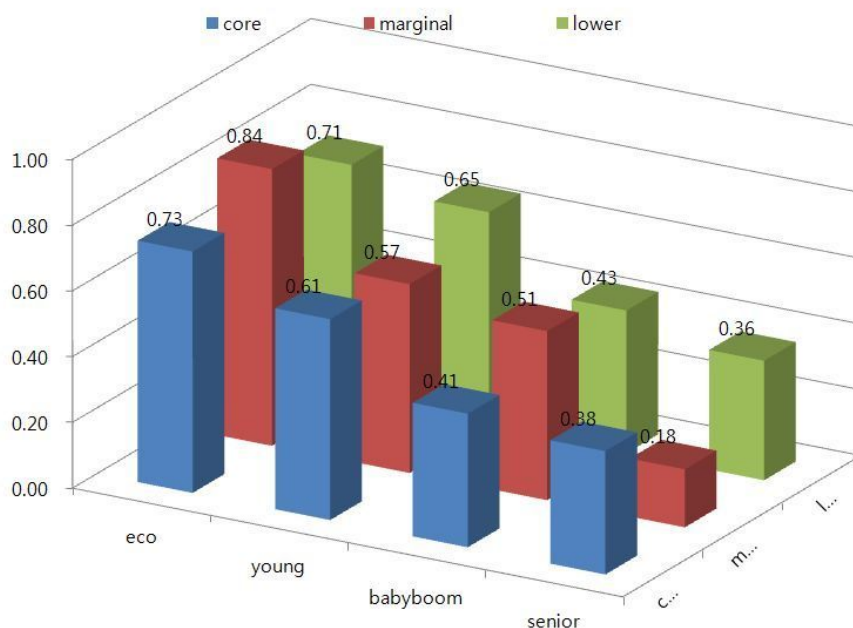


[그림 15] 탈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진보적 가치관의 관계

과실을 누리며 청장년기를 보낸 행복한 세대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희망의 문화는 점차 쇠퇴하고, 중산층의 계층적 자신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그 충격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적극적으로 정치의 장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을 가장 극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에코세대는 과거의 성장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탈물질주의적이고 생태주의적이며, 사회적 응집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의 치열해진 경쟁에서의 생존욕구로 인해 끊임없이 좌절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들의 불완전한 좌표는 정치적 무력감으로 표현된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살펴보면 그 비중은 에코세대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서 70%에서 80%를 넘나든다. 반면에 노인세대에서 무당파는 40% 미만이고, 가장 사회적 위험 노출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큰 주변적 중산층 노인들에게서는 18%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변화의 단초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에코세대의 정치적 선택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보다 진보적 가치로 무장하고,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대안적 비전을 정치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과거 성장시대의 과실에 익숙한 베이비붐세대와 노년세대의 물질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정치적 참여에 압도되어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지속해 나갈 것인지가 향후 미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그림 16] 계층 및 세대별 무당파의 분포